"의원수 360명 증원 · 투표연령 만18세"

정개특위 자문위원회 의견서 전달식 개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국회 예산 동결
투표 참여 연령 만 19세→18세로 낮춰야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의견서 전달식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이 강대인 자문위원장으로부터 의견서를 전달받고 있다. 왼쪽부터 강원택, 강대인 자문위원, 문희상 국회의장,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 김종민, 김성식 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자문위원들은 9일 국회의원 수를 증원하고 투표 연령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체 안을 제시했다.

자문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3식당 별실 1호실에서 진행된 '정개특위 자문위원회 의견서 전달식'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발표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강원택 서울대 정치학 교수 등 1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은 의견서에 "선거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정개특위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들은 "현 제도의 특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채택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 수는 360명 규모로 증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수가 증가하더라도 국회 예산을 동결하고 국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공천 과정에서 여성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대표성이 보장돼야 하는 공천제도 개혁과 정당 개혁도 필요성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OECD 35개 국가 중 투표 연령이 만 19세로 규정되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현재 만 19세로 돼 있는 투표 참여 연령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일부 자문위원들은 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증원하는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기우 자문위원은 "대선거구로 개편하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지 않아도 의석 배분의 비례성을 확대함과 동시에 소지역 이기주의의 폐단을 극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 의정활동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헌조 자문위원은 "의원정수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360명으로 못 박아 제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회에서 여야 간에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고 범위를 정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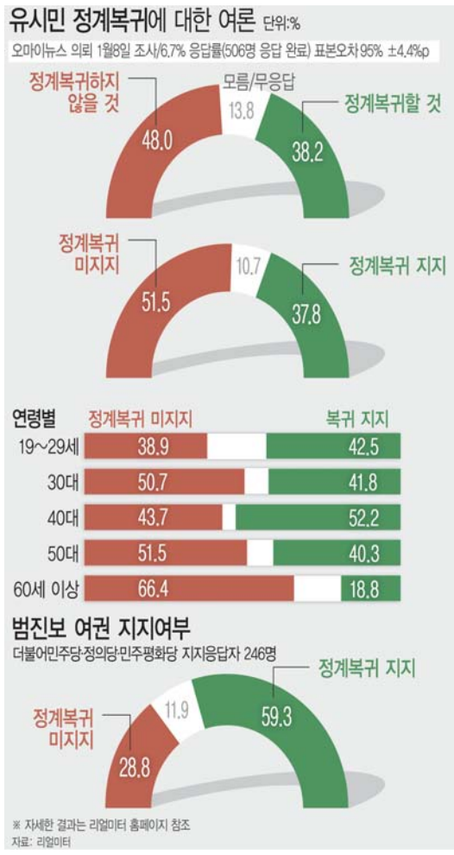
최금숙 자문위원은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일"이라며 "360명보다는 330명 정도를 제안한다"고 의견을 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각 당은 자문위원 의견서를 참고해 입장을 정리하고 정개특위에서 결론을 낼 수 있게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개특위 계획대로 2월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대로 4월까지 선거구도 확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으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약속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2주 동안 집중 논의해서 이견이 있으면 있는데로 정개특위 제도 개선안을 만들고 쟁점에 대해 정치적 협상 등을 병행해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시민 정계복귀 부인에도 범진보 · 여권 59.3% 지지"

리얼미터, 모든 이념성향서 '복귀 안할 것' 전망 우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계복귀설을 재차 부인한 가운데 범진보·여권은 절반 이상 그의 정계 복귀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지난 8일 전국 성인 507명(7569명 접촉, 응답률 6.7%)을 대상으로 유 이사장의 정계복귀 전망을 조사한 결과, '복귀하지 않을 것이다'는 응답이 48.0%로, '복귀할 것이다'는 응답(38.2%)보다 9.8%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3.8%다.

유 이사장의 정계복귀 지지 여부 조사에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1.5%로, '지지한다'는 응답(37.8%)보다 13.7%p 높았다. '모름·무응답'은 10.7%였다.

진영별로 보면 결과가 상반되게 나뉘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을 지지하는 범진보·여권 응답자층은 유 이사장이 정계복귀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54.2%('할 것' 32.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정계복귀를 지지한다는 응답 역시 10명 중 6명에 이르는 59.3%('지지 안함' 28.8%)로 조사됐다.

반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을 지지하는 범보수·야권 응답자층은 유 이사장이 정계복귀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44.8%('안할 것' 39.5%)로 다소 우세했으나 그의 정계복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9.9%('지지' 13.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유 이사장의 정계복귀 부인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역별, 세대별로 보면 유 이사장의 정계복귀에 대한 전망에서는, 서울(복귀 안할 것 56.5% vs 복귀할 것 32.1%)과 부산·울산·경남(55.2% vs 32.2%), 대전·세종·충청(46.9% vs 42.2%), 광주·전라(46.6% vs 31.4%), 30대(55.8% vs 36.1%)와 40대(50.8% vs 35.9%), 20대(49.5% vs 38.0%), 50대(46.9% vs 41.2%), 진보층(54.3% vs 37.7%)과 보수층(48.7% vs 37.9%), 진보층(46.8% vs 39.2%)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대구·경북(43.9% vs 48.3%)에서는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고, 경기·인천(42.4% vs 42.4%)과 60대 이상(40.6% vs 39.3%)에서는 두 전망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이번 조사 전국 19세 이상 성인 7569명에게 접촉해 최종 506명이 응답을 완료, 6.7%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한국당 중진 "경제 · 안보 관련 대여투쟁 강화해야"

정우택 "靑, 이제 개판 5분 후"

자유한국당 중진의원들은 9일 나경원 지도부에 강력하고 신속한 대여투쟁을 주문했다.

정갑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현재 문재인 정부 실정에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당내에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당보다 나라를 구하자"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은 "노영민 비서실장은 임명됐어도 김정은 방중이 끝날 때까지 현지에서 지휘를 하고 들어왔어야 했다"며 "문재인 정권은 정말 한심한 정권이고 국제무대에서 이런 행보를 어떤 식으로 평가하겠냐. 남의 손가락질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지금 가짜뉴스에 대응한다고 하는데 이런 정부의 태도에 우리 당도 적극, 지속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유철 의원은 "신년 벽두부터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동서남북 고립무원이자 사면초가에 빠져가고 있어 걱정된다"며 "김정은은 답방 대신 중국을 갔고 한미동맹의 중요 축인 주한미군 주둔 비용 등 방위비 협상 시한을 넘기고 교착단계"라고 설명했다.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우리는 속칭 무질서하고 난장판 상태를 개판 5분 전이라고 하는 지금 청와대는 개판 5분 후가 됐다"며 "군장성급 인사를 앞두고 일개 청와대 행정관이 50만 육군 수장인 참모총장을 카페로 불러내 진급심사 대상자를 동석시킨 게 정상이냐"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신재민 전 사무관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등 정상적인 나라에선 벌어질 수 없는 해괴망측한 이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 당이 야당다운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을 한다. 의원총회를 해서 총력투쟁 선언을 하고 상임위 별로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의원은 "이제 괴물 청와대가 되고 있다"며 "청와대 4급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서울로 불러냈다고 한다. 또 대령 인사 서류를 가지고 나가 통째로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청와대 누가 육군 장성 대령 인사에 관여한 것이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국정농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먼저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야당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고 성토했다.

조경태 의원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선임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인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분께서 춘풍추상(春風秋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알고 썼는지 모르겠다. 이 뜻은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대한다는 뜻"이라며 "춘풍추상을 이행하겠다 한다면 즉각적으로 특검 받아들여야 한다. 그게 춘풍추상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영 의원은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수사가 마무리되면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기로 원내대표 간 합의된 바 있다"라며 "청문회를 개최하자는 한국당의 요구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 위원장과 간사가 협조를 해주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문회가 조속히 개최되게 원내대표가 적절히 신속한 조치 취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